

“MB·차 사면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국민 공감에 대전제”...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말 할 권리 누구도 없어
사면론, MB·차 지지 국민 아픔 아우른 것... 경청
오히려 통합 해쳐... 개인적으로 한명숙 안타까워
대통령 일방적 사면권 행사 않는 게 시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그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나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퇴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모두 사면할 수도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할 적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제 시대적인 요청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

전북도의회 소식

“전주대대·통합예비군 훈련대대 이전 취소를”

황영석 부의장 “평지 사격장 3~4면 신설 등으로 주민안전 보장하기 어려워” 취소 요구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대대와 통합예비군 훈련대대 이전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황 부의장과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등은 지난 15일 전주대대 이전반대 항공대대 소음피해 김제·익산 비대위(이하 비대위)에 참석해 “전주시가 전주대대와 통합예비군 훈련대대까지 도도동 일대로 이전하려 한다”면서 “이럴 경우 평지 사격장 3~4면 신설과 사격훈련으로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주야간 사격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특히 “예비군은 정규군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 총기 실사격 등 각종 폭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공대대와 최소 4-5km 이상 떨어져 배치하는 것이 항공대대 및 군의 안전 확보와 정상적인 훈련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평지 사격장 3-4면 신설과 잦은 사격으로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총성과 화약 냄새 확산에 따라 동식물 생태계 전반에 문제를 일으켜 환경상 생태학적인 사업과 농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방부가 2018년 7월 작전성 검토 결과, 덕진구 도도동 항공대대 일원으로 ‘조건부 동’을 한 바 있고, 2020년 9월 기본설계 60% 특별기술심의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동’을 조건부로 승인했으나, 전주시는 두 차례 모두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 및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비대위는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당시 도도동에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인근 항공대대 외 다른 군사시설은 들어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다시 전주대대를 이전하면서, 항공대대 주변에 공공청사를 이전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익산·김제시민을 기만하는 폄우가 아닐 수 없다”며 전주대대 이전계획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농어민 위한 적극 현안대응 ‘주목’

민주 이원택 의원, ‘감자 냉해 피해 지원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액 상향’ 등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은(김제·부안)이 각종 농어업 현안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면서 잇따른 성과를 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와 각종 풍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축수산물계 지원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액 제한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고, 지난 15일 권익위의 최종 의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도출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각계 농축수산물 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당 지도부,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 청탁금지법 소관기관인 권익위 등과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해왔다. 실제, 권익위가 전원위 차원의 시행령 개정 의결을 하기 전인 지

난 7일, 이원택 의원은 권익위 이견리 부위원장과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정부가 신속하게 발표된 감자 냉해(언파해) 피해농가 지원대책 추진에도 이원택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8일~10일간의 한파로 인해 심각한 감자 냉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원택 의원은 즉시 부안 등 현장을 방문, 지자체와 함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과 유의를 통해 피해농가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식품부는 농약대와 경영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의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했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19와 각종 자연재해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농어업인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공익형 직불제, 농어업 재해보험 등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인센티브가 바람직”

문 대통령, “코로나로 돈 번 기업 자금 출연해 취약계층 지원... 제도화 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또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런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 전제는 그걸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3회에 걸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열거한 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국화를 다 막아내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고용 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자나 승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익공유제 사례로 “선례가 과거에 있었다”며 “한·중 FTA가 농업·수산·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혀 이르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 당

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다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용된 바 있다. 물론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 운동도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K-양국화 대응을 위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바 있다. /뉴스

문 대통령 “접종·집단면역, 한국 결코 늦지 않아... 오히려 더 빠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9월까지의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

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2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했다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 후

회하신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며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도입해서 위험도 분산시켰다”고 설명했다. /뉴스

“지역구 국가예산 9173억원 확보”

민주 안호영 의원, 21대 국회 1년차 의정활동 성과로 제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제 21대 국회 1년차 의정활동 성과로 “26개 법안 대표 발의를 통한 8건의 분회의 통과, 지역구 국가예산 9173억원 확보”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18일 완주군청에서 의정활동 보고감담회를 통해 제시한 지역별 국·도비 확보액은 완주 4513억원, 진안 1354억원, 무주 1730억원, 장수 1576억원 등 총 9173억원이다. 특히 완

주군 출판문화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송연료전지 재제조사업, 진안군 비위생매립쓰레기 정비사업, 무주군 공공요양병원 치매병동 설치, 장수군 국도 13호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단계에서 2050 탄소중립(NET ZERO)선언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143억원(수소충전소 운영비 16억원, 메가스테이션 조성 사업 60억원,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 31억원, 사후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17억 5000만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 수호와 기후변화 시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주력해 왔다. /뉴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하라”

전주시의회, 정부 차원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생계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전제 한 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 개정 전까지 정부가 긴급

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 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시대 종료일까지 연장에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보상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런 대책들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이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희 의장은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의회, 전입직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021년도에 신규로 전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18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전북도교육청(9명)과 전북도(8명)에서 배치된 신규 전입 직원들이 조직개편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변화된 의회사무처 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18일 전북도의회 의원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회사무처에 신규로 배치된 직원들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을 비롯해 각 상임위에 배치돼 의원들의 보좌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전북도의회의 연혁과 지방자치의 지위, 권한, 구성 및 조직, 위원회 활동 등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내용과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등이 소개됐다.
송지용 의장은 “전북도의회는 조직개편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으로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며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의 인재를 두루 총원한 만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